

96년도 경쟁정책 운용 방향

이정재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쟁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

1996년은 WTO체제 출범 2년째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경제기획원 산하기관에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개편된지 2년째가 되는 해이다. 또한 3월부터는 차관급 기관에서 장관급 기관으로 한층 위상이 제고되어 또다른 의미의 새로운 출범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쟁정책의 주무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된 지 1년만에 그 위상이 제고되고 조직이 강화되는 것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경쟁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세계는 지금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되어가고 있다. 국경에서의 무역장벽이 대폭 낮아지고 국가간 경제적 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기업활동이 세계화되고, 국내 영역으로 간주되던 법제·정책·관행 등이 기업의 시장 접근 및 경쟁 능력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의 확산에 따라 국제통상협상의 의제와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좀더 공통적인 경쟁조건을 가진 좀더 개방된 세계시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자간·지역적·쌍무적 조정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OECD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 규범 마련 논의도 보다 평준화된 경쟁의 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 중 하나이다.

대내적으로도 자율화·개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그 구조도

복잡하게 됨에 따라 정부 개입의 시장 실패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호·규제 위주의 각종 산업정책을 경쟁 촉진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경제 운영에 있어서 개별 산업 지원정책보다 경쟁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금년에 하여야 할 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고 하겠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 확보를 지원

경제력집중 현상이 부분적으로는 다소 완화되는 추세도 보이고 있으나 소수 특정인이 계열회사에 대하여 높은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을 지배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과도한 계열기업 확장과 사업 영역 다각화도 지속되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은 단기간의 압축된 고도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으로써 그동안 우리 경제발전엔 기여한 바가 크고 ‘규모의 경제’ 이익 등 긍정적 요소도 많은 것이 사실이나, 지나친 소유집중에서 오는 사회적 형평 문제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인적·물적 자원이 소수 기업집단에 편중 배분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 전체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금년에도 경제력집중 완화에 역점을 두어 인적·물적 자원이 경제 각 부문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함과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열위적 관계에서 오는 불리한점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확장을 억제하고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 한도, 채무보증 한도, 소유 분산과 산업합리화를 위한 유인 제도, 기업 결합에 대한 심사나 독과점 관리 등 모든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미비점을 보강하고, 특히 경영구조의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 출자 및 채무보증한도 초과, 탈법적인 위장 분산, 독점력을 이용한 남용 행위, 계열사와 비계열사간의 차별적인 부당내부 거래 등 불공정 행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그리고 모든 기업간에 공정한 경쟁풍토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정착

시장지배적사업자 등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시정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것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부당 스카웃이라든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업체 또는 납품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대리점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상시 감시하여 시정·조치함으로써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불공정하도급거래는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부실공사의 원인도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어 금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불공정하도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불공정 계약, 위장 하도급, 하도급 대금의 발주자 직불 제도, 범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경기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류, 기계 등 취약 업종과 주요 공공 공사 및 대형 건설 공사를 중심으로 한 제조하도급과 건설하도급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정착되도록 하겠다.

또한,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도급대금도 제대로 지급될 수 없으므로 발주자에 대한 조사부터 선행해 나갈 방침이다.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우리 기업들이 국경없는 무한경쟁에 이겨나가기 위하여는 경쟁력을 배양하는 데 모든 역량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루지 않고서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배양될 수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산업 전반에 경쟁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법령, 제도, 관행의 개선 작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 30개 법령과 218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요소 400여 건을 개선 조치한 바 있으나, 금년에도 작년에도 이어 계속 경쟁제한법령 정비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경쟁구조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운수, 통신, 에너지 등 국민경제에 파급 영향이 큰 산업을 대상으로 당해 산업과 관련되는 분야를 종합하여 진입 규제, 영업 활동 규제 등 경쟁제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이러한 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당해 산업에 대한 심층 분석뿐만 아니라 제도 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시 또는 각 부처가 소관산업의 규제와 지원, 공기업 민영화, 대외무역 및 투자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경쟁개념을 적극 도입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됨으로써 금융·통상 산업 등 다른 경제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한편, 정부공사의 입찰담합이나 각종 서비스 요금의 담합 인상 행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중점 감시하고 적발시에는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이러한 관행들이 불식되도록 하겠다.

국민생활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단속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공정거래 행위도 중점 단속할 분야이다. 예식장, 영안실, 공원묘지 등의 기위팔기와 백화점의 허위 바겐세일에 대해서는 조사 단속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범람하고 있는 건강 보조식품, 학습 교재

등의 허위 과장 광고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과 통신 발달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통신판매와 프랜차이즈 등 새로운 업태와 판매방식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도 보완하고 조사 단속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

약관은 대다수 국민의 권익과 관련되고 또한 분쟁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역점을 두어 개선하는 분야의 하나이다. 금년에는 상가·건물 분양 약관 및 임대차 약관, 스포츠·레저 시설 등 회원제 시설 이용 약관에 대하여 체계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은행 병원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제정·사용토록 하여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

국제 경쟁정책 동향에 적극 대응

그간 OECD, UNCTAD, APEC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던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규범 마련 논의가 금년에는 그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 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아울러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쟁정책 문제를 이유로 한 통상압력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초에 관계부처, 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OECD, UNCTAD 등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과제별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미국, EU 등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이유로 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쌍무협력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